

## [ 오피니언 ]

## 월/요/광/장

장 병 완



외지에서 광주를 방문한 사람들의 눈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표어나 구호 중에서 특히 관심을 끄는 구호가 있다. 바로 '1등 광주, 1등 시민'이 그것이다. 본래 행정기관에서 내놓는 구호나 표어는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의 목표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려는 경우에 자주 활용되어 왔었다. 지난 시절 박정희 정권이 새마을운동을 전개하면서 내걸었던 '잘 살아보세'는 당시의 가난하고 힘든 삶을 극복해 보자는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낸 성공적인 구호로 평가되고 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구호가 갖춰야 할 요소가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직자 및 시민들의 열정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나의 여부가 아닐까 싶다. 과연 '1등 광주'를 접하는 시민, 공직자들이 가슴에 '1등 광주'에 대한 자부심과 목표를 달성하려는 열정이 있는 것일까?

국민의 정부 이전의 광주는 80년대 민주화운동의 성지라는 자금과 함께 지역 주의의 피해지역이라는 의식이 공존하고 있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은

## 진정 '1등 광주'가 되려면

광주가 한국 역사의 객체에서 주체로 자리매김된 시기로서 과거 수십년 간 무형적 차별로부터 해방이자 변화에 대한 희망이 분출되던 기간이었다. 작년 대선 이후에는 많은 시민들이 과거의 차별과 소외의 시절로 복귀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1등 광주', 광주의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어 정권의 행보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광주의 내부적 역량과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다. 사실

비중은 가장 높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광주의 분위기는 지역 전체의 '파이'를 키우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주어진 '파이'를 나누어 갖는데 더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은 아닐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현대증공업이 있는 울산의 1인당 GRDP가 서울의 2배, 광주의 3배 정도 높은 수준이고 군산시는 현대증공업을 유치하여 세계 최대의 조선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역들과 경쟁하기 위

해 광주는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고민을 해 볼 일이다.

무역·투자의 자유화,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 등으로 세계가 단일시장으로 통합되어 가는 추세에서 광주는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의 도시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의 어떤 도시들과도 경쟁해야 하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모두들 경제 선진화의 무한경쟁에 힘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1등 광주'의 불을 지필것인가?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진정한 '1등 광주'는 광주가 지난 모든 역량을 총집집시킬 때에 달성될 수 있다. 광주의 미래 발전 청사진을 지역 내·외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어 작성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민·관·학·노·사·시민단체 등을 망라한 광주의 모든 구성원들이 지금까지 서로 대립하거나 소원했던 관계를 빗어 던지고 절박한 심정으로 뜻을 모아야 한다. 뜻을 모으면 통했던 역사를 광주는 가지고 있지 않은가?

'5월의 노래'는 '하나 되는 광주'를 위해 불려져야 한다.

〈호남대학교 총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 법조 칼럼



이상각

검찰과 경찰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에 대한 처벌 방침을 거듭 밝히면서 누리꾼과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촛불문화제 중 미신고 집회 등에 대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적용해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옥의 집회 및 시위에 대해서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고, 관할 경찰서장이 금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 미신고 집회 및 금지통고 집회 참여자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협행 집시법은 위헌이라는 의견이 유력하다.

헌법 제21조는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

한 나머지 부정의한 일에 관해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복종하지 않을 것이며, 복종하기보다는 차라리 죽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요컨대,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남기고 독배를 마셨다는 소크라테스 일화는 권리주의 시대의 악법들을 정당화하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라는 것이다.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Antigone)는 부정의의 실정법에 위반하는 한이더라도 자연법적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정당함을 가르치는 신화로 유명하다.

테베의 왕위에 오른 삼촌 크레온이

## 악법도 법이다?

를 금지하고 있는데, 현행 집회신고제는 실질적으로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어 이 규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전통적인 비판 논거 중 하나가 '악법도 법이다(dura lex, sed lex)'는 금언이다. 사형선고를 받고 수감되어 있던 소크라테스는 친구 크리토로부터 탈옥을 권유받았지만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과 함께 독배를 마시고 죽었다는 일화가 이 금언의 근거이다.

그러나 플라톤·크세네풀 등 소크라테스의 언행을 기록한 당대 저술가들의 문헌을 살펴보면 분석한 학자들은,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말한 적이 없고, 악법의 희생자도 아니며, 악법을 지키려고 죽은 자도 아니라고 한다.(원장은: 강정인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고려대학 교 출판부)

오히려, 소크라테스는 철학을 포기하면 석방시켜 주겠다는 법정의 조건부 석방 제안을 거부하며 국가가 자신에게 철학을 포기하라고 명령하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은 "오로지 신께 복종할 것"이라면서 재판에 저항했다고 한다. 또한 "나는 죽음을 두려워

오빠 폴리네이스케스를 반역죄로 사형 시킨 다음 그 시체를 둘에 내다버려 짐승의 밥이 되게 했고, 이를 거여하는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고 명령했다. 그러나 안티고네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오빠의 시체를 몰래 매장했다가 지하감옥에 갇히자 자살하였다.

왕의 명령과 안티고네를 수감한 행위가 잘못인가? 실정법에 해당하는 왕의 명령을 어긴 안티고네의 행위가 잘못인가?

법이라는 존재형식 자체는 정당성이 근거가 될 수 없다. 그 내용 역시 정의에 합치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2004년 11월 7일 소크라테스 일화가 준법정신을 강조하기 위한 사례로 중학 사회교과서에 소개된 것은, 준법이란 정당한 법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당국은 국민을 불안과 분노에 빠뜨리고 있는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사태에 직면하여 재협상을 요구하는 국민에게 집시법을 들이대고 있다. 그러나 국민에게 준법행동을 강조하기에 앞서 집시법의 위헌성부터 제거해야 한다. '악법도 법'은 아니기 때문이다.

〈변호사〉

## 기 고



나도 팔

지난 7일 해남군청에서는 역대 해남 군수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가 열렸다. 지난해 12월 보궐선거로 부임한 김종식 해남군수가 선배들의 지혜를 듣고자 마련한 자리였다.

이날 모임에서는 해남의 발전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갔고, 공무원의 의식변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했다고 한다.

사실 '변화'에 대한 확률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존재하지 않는 무한경쟁시대에서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진리다.

특히 문내면에 200억 원이 투자되는 조선기자재 생산공장 설립 협약과 황산면 호동에 1천억 원이 투자되는 해남 마린 콤팩트박스 조성하기 위한 투자 협약은 두드러진 성과로 꼽힌다.

또 공무원들이 직접 발벗고 나서 동

계 전지훈련단을 적극 유치한 결과 66개팀 2천여명이 해남에서 겨울을 보냈다.

전국 규모의 대회가 잇따라 열리면서 수십 억원의 경제 효과를 유발했다. 해남의 특색있는 '먹거리촌 조성 계획' 수립과 해남의 대표적 관광자원인 땅끝의 절경을 보전하기 위해 '경관보호 조례' 지정을 위한 용역 등이 변화된 성과 중 하나다.

요즘 해남군은 10년 후의 잘사는 미래를 내다보고 기업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

오는 2012년까지 100개 기업을 더 유치하기 위해 군민들과 공직자가 뜻을 끌어 모여 1천억 원이 투자되는 해남 마린 콤팩트박스 조성하기 위한 투자 협약은 두드러진 성과로 꼽힌다.

이 같은 공직사회의 군민 중심의 변화는 모든 군민이 행복하게 잘 사는 고장으로 만들기 위한 실천의지인 만큼 땅끝 해남의 변화와 행복의 시작점이 되길 기대해 본다. 〈해남군 부군수〉

## 땅끝 해남에 변화 바람이 불고 있다

'땅끝 해남'도 최근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새로운 변화를 진행중이다. 해남의 옛 자존심을 회복하고 새로운 해남을 만들기 위해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변화·행복 운동(C·H-Change & Happiness 운동)'이 바로 그것이다.

변화·행복 운동은 김종식 군수가 그 동안 찾은 선거로 눈屎된 민심을 한 곳으로 모으고, 낙후된 해남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군정 목표로 내건 의식 개혁 운동이다.

해남군 800여 공직자들은 각 종 행사에서 가식적인 인사말을 줄이는 것부터, 크게는 국고지원 확대를 위해 국정 철학에 맞춘 맞춤형 시책 개발까지, 행정편의주의를 탈피한 다양한 변화의 발상을 쏟아내고 있다. 〈해남군 부군수〉

경찰과 경찰이 어려운 노력을 했는지 고민을 해 볼 일이다.

무역·투자의 자유화,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 등으로 세계가 단일시장으로 통합되어 가는 추세에서 광주는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의 도시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의 어떤 도시들과도 경쟁해야 하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모두들 경제 선진화의 무한경쟁에 힘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1등 광주'의 불을 지필것인가?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진정한 '1등 광주'는 광주가 지난 모든 역량을 총집집시킬 때에 달성될 수 있다. 광주의 미래 발전 청사진을 지역 내·외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어 작성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민·관·학·노·사·시민단체 등을 망라한 광주의 모든 구성원들이 지금까지 서로 대립하거나 소원했던 관계를 빗어 던지고 절박한 심정으로 뜻을 모아야 한다. 뜻을 모으면 통했던 역사를 광주는 가지고 있지 않은가?

'5월의 노래'는 '하나 되는 광주'를 위해 불려져야 한다.

〈호남대학교 총장〉

## 시 설

## ‘5·18’에서 통합·상생 역설한 이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오월 광주'에서 통합과 상생을 역설해 주목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어제 5·18민주화운동 제 28주년 기념사를 통해 "5·18을 통합과 상생을 주문한 것은 고무적이다. 우리의 국론 분열은 심각하다.

그런 이 대통령이 5·18을 적극 평가하며 통합과 상생을 주문한 것은 고무적이다. 우리의 국론 분열은 심각하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한·미 자유무역 협정, 대운하 건설 등을 놓고 대립하고 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도 확산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도 대한 지지율은 20%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새 정부에 위기상황이 아닐 수 없다.

5·18정신은 국민통합의 에너지로 승화돼야 한다. 통합과 상생은 '오월 광주'가 국민에게 대지는 메시지다. 국민화합, 사회통합, 지역통합 없이는 경제살리기는 물론 선진 일류국가 건설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부터 변화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말'이 아닌 '행동'으로 통합과 상생을 실천하기 바란다.

## 도 넘은 쇠고기 유통 '거품' 개선 시급하다

국내 쇠고기 유통 거품이 도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 과정에서 비용과 중간 이윤이 쌓이고 쌓여 축산 농가가 450만 원에 판 한우를 일반 소비자들은 750만 원에 사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왜곡된 유통구조가 유통업자의 배반 불리고 정작 축산농가와 소비자는 '봉'이 된 셈이다.

농수산물유통공사(aT)의 '2007년 쇠고기 유통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남지역 축산농가는 중간유통업체에 한우암소(600kg) 한 마리를 넘기고 손에 쥐는 돈은 450만 원이다. 중간유통업체는 매매·도축 대행비용과 운송·운행비·이윤 등 35만 원을 덧붙여 정육점에 485만 원에 넘기고, 정육점은 다시 여기에 점포운영비·인건비 등 간접비 100만 원과 이윤 165만 원 등을 더해 750만 원에 판매한다.

소비자가 치르는 쇠고기 값의 60%만 축산농가에 돌아가고, 나머지 40%는 중간 유통업체에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수차례 유통구조 개선을 약속했지만 말뿐이었다. 축산농가를 조직화해 생산·가공·유통 단계를 통합하고 산지 소비의 등락을 소비자가격에 연동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 특히 소매단계에서 추가되는 비용과 이윤이 전체 가격의 35%에 육박한다. 유통구조의 악순환 고리에 중간상만 재미보고 축산농가와 소비자는 골탕먹는 형국인 것이다.

지금처럼 소매가격이 2배에 이르는 유통구조에서는 한우가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왜곡된 유통구조를 개선하지 않는 한 축산농가는 농가의 붕괴는 불免 뻔하다.

이 같은 기형적 유통구조는 단골리 허리를 끊어야 한다. 유통단계와 유통마진을 줄여 한우의 소비층을 넓히고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얘기다.

그동안 정부는 수차례 유통구조 개선을 약속했지만 말뿐이었다. 축산농가를 조직화해 생산·가공·유통 단계를 통합하고 산지 소비의 등락을 소비자가격에 연동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無 等 鼓



난동 '뿔이와 전라도의 합작품'이라는 거짓으로 진실을 분칠하고 있다. 국군이 시민을 향해 총을 쏘 수 있었느냐'라는 '상황론'은 단골 메뉴다.

사람의 기억력은 선별적이고, 진실은 망각의 미망에 물허기 마련인가. 현실이 힘들수록 추악한 과거는 미화된다.

그런 예는 수없이 많다. 멀리서 찾을 것도 없다. 지난해 국군의 힘으로 쓰러났던 태국의 부패 총리 탄핵은 귀환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필리핀에서는 독재자 마르코스의 부인 이엘라 숭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수년 혹은 수십년 전의 일을 과거사로 치부하고, '우리하고'

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눈감는 대중의 우매함이 되풀이되고 있다.

토마스 칼라일은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지 못하는 민족은 실패의 역사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런 점에서 진실에 대한 기억력은 국민 수준의 척도다.

그 예는 수없이 많다. 멀리서 찾을 것도 없다. 지난해 국군의 힘으로 쓰러났던 태국